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년, 성과와 과제<sup>1)</sup>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성주류화 전략 강화를 위해 확립된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기관 주류 정책의 성인지적 변화를 견인할 만큼 강력한 조정 기능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던 가운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2018년 미투운동을 거치며 드러난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배경이 되는 해당 분야 고유의 성차별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박선영, 2020: 4; 마경희, 2020: 32). 이런 배경 아래에서 교육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지 5년을 맞아, 이 글은 그동안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중앙행정기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및 운영 현황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 이상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안이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5월 7일 직제가 시행되면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현재와 같은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각 담당관실에는 4급 상당의 담당관과 전문경력관 1명을 포함하여 6~12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었고,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외 5개 부처는 기획조정실 관할 부서로 편제되었다.<sup>2)</sup>

1) 이 글은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와 과제」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2) 국방부와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각 군인권개선추진단, 인권정책관 등 인권 관련 부서 산하에 설치되었고, 경찰청은 경무인사

설치 당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소관분야 양성평등 정책 총괄 및 성평등 관점의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및 교육 총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 등을 주요 기능으로 표방하였다.

대검찰청 등 이전까지 기관 내에 없던 기능을 완전히 새롭게 수행하게 된 부처도 있었지만, 타 부서에서 수행 중이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아 신설 기능과 함께 수행하게 된 부처들이 대다수였다.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처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그 결과 이들 부처에서는 기존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 기능을 확대하고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성과

이 절에서는 지난 5년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운영 성과를 주요 기능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반 구축 △성인지 관점의 정책 개선과제 발굴·시행 △기관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조직혁신 추진 - 이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8개 부처의 사업 성과를 종합·정리하였다.<sup>3)</sup>

#### 가.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반 구축

먼저 대부분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

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개정하고 자체 양성평등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처 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양성평등 책무성에 대한 조직 내 합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대내외를 아우르는 양성평등 관련 협력 기반을 정비하고, 소속·산하기관에게까지 양성평등 업무 담당을 배치하여 부처 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8개 부처 모두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소관분야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일 뿐 아니라, 부처 내 고위직과 타 부서의 관심을 환기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부서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소속·산하기관 내 양성평등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배치하고, 이들과의 정기적인 회의체를 운영하거나, 대학, 문화예술계 등 소관분야까지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센터 설치를 통해 소관분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추진체계를 구축한 점도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교육부, 경찰청은 소속기관에 자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전문·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관업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여 분야별 성인지 정책의 생산과정을 체계화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

기획관 산하에 설치되었음

3) 지면의 한계로 개별 부처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충분히 실을 수 없어, 해당 내용은 김원정·최유진·정윤미(2023)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다.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 사업 내용 및 성과를 대외에 알리는 홍보물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성인지적 업무 수행 방식을 각 분야 특성에 맞게 정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8개 부처에서 5년간 1만 건 이상의 홍보물, 1,600건 이상의 훈령·예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 성인지적 정책 수립·평가에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정리·보급하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성인지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선 조치도 시행했다. 대부분 부처에서 소관분야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부처에서 운영하는 통계 웹사이트에서도 성인지 통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통계 생산 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소관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조사 기획, 설문지 작성, 기초통계 분석 및 공시 과정 전반에서 개선점을 발굴·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소관분야 주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기획·실행·평가·환류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

## 나. 성인지 관점의 정책 개선과제 발굴·시행

각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현장에 밀착

된 양성평등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시행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의제·영역으로의 양성평등 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 부처 내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성인지적 정책 개선 성과를 제고하고, 성주류화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계획 산출률에 있어 8개 부처가 중앙부처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sup>4)</sup> 더불어 소관분야 전문가로 부처 자체 성주류화 컨설턴트를 지정·운영한 사례(보건복지부), 전문가 심층 평가에 기반한 자체 특정성별영향평가제를 도입한 사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모색한 사례로도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소관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학교 성평등 교육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경찰청의 경찰직 남녀통합 선발 제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개발·확산, 대검찰청의 젠더폭력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 성평등 교육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셋째, 소관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초기 사건대응 체계 정비

4) 2019년 중앙부처 평균 개선계획 산출률 10.6%, 8개 부처 평균 11.9%, 2021년 중앙부처 평균 개선계획 산출률 16.1%, 8개 부처 평균 22.4% -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21; 여성가족부, 2023) 중 부록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를 토대로 산출

를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은 후반부로 갈수록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배경이 되는 각 분야 고유의 문화·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조직문화 진단·컨설팅 사업 추진 및 방문형 돌봄노동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정비,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한 소관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조직혁신 추진

소관분야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전제이자 공직사회 조직의 기본 책무로 ‘양성평등 조직혁신’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과업으로 가시화하였다는 점도 대표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운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정책을 기획·시행하거나 일선 현장에서 남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직자가 양성평등 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부처 내 의사결정과정에 남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성주류화 추진의 주요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공무원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리더십 및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체계에 양성평등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양성평등 관점을 조직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으로 설정하였다.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서 양성평등 인식조사 결과,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이 이전 대비 향상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성과를 방증한다. 그 외에도 양성평등 관련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에 구성원

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한 점도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남성집중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는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성별 균형인사, 일·생활균형, 성인지적 시설·인프라 개선 등 양성평등한 조직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각급 조직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 설정 및 이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조직적인 양성평등 조직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타 중앙행정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할 만한 선진적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모델을 확립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관련 행정규칙 정비, 종합계획 수립, 소속·산하기관까지 포괄하는 전 조직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참여자의 공감과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방식을 시도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비대면 위주로 운영된 공직 내 폭력예방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축적하였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부처의 양성평등 책무성을 제도화·구체화함으로써, 소관분야의 실질적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설치 당시 소관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추진에 초점을 두었던 데서 더 나아가, 분야별로 성인지 관점의 새로운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시행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심화·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양성평등 관점의 조직혁신 기능을 각 부처 양성평등 담당부서의 역할로 설정하고,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직 내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한 부처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신규 양성평등 정책 의제 발굴, 양성평등 조직혁신 업무 확장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특성에 따라 주력 기능을 심화·발전시키는 특화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모델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정책을 기획·실행하는 부처의 경우,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가 우선 과제로 제기되지만,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 일선 현장에서 수사,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관리·감독 등 대국민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해당 활동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조직혁신 기능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대체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리라 기대되었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부처 업무 및 조직 형태의 고유성을 반영한 기능을 특화해 나간다면, 이는 양성

평등정책담당관이 해당 부처에 뿌리내리는 과정이자 동시에 다양한 차원의 양성평등 정책이 심화·확장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전반의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양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 양성평등 정책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8개 부처 이외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가 요구되는 부처에 신설부서를 확대하는 방안이 여가부의 주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 각 부처 양성평등 정책 현안이나 부처 간 공통 이슈에 대한 대응, 개별 부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범정부 양성평등 관련 기본계획 간 연계 등 부처 간 협력 및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할 여가부 내 인력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가부와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공통 현안·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위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도 여가부 내 자원이 적절히 배치될 때 가능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마경희(2020).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성주류화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주최/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2020.5.27.) 자료집
- 박선영(202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주최/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2020.5.27.) 자료집
-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